

한화갑 前대표 소환조사 파장과 전망

# '공천헌금 불똥' 지방선거로 번지나

## MB 토착비리 척결 표명 맞물려 민주당·지역정가 긴장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헌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역 국회의원과 한화갑 옛 민주당 대표 소환조사로 이어지는 등 가속도를 내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튀길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6·2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척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나서면서 '공천헌금' 수사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과 지역정가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 원씩을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모 도의원과 박모 전 도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9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한화갑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전·현직 두 명의 도의원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된 뒤 건넨 자금이 공천 대가인

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와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여서 지역정가의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당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천 라인'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어 당시 민주당 공천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 민주당 중앙당이 전남지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일부 지방의원에게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등 역할을 했다는 것이 당시 공천 신청자 등 지역인사들의 대체적인 전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천 대가 정황이 포착된 두 의원 이외에 검찰이 실제 소문처럼 떠돌았던 공천헌금설 등의 입증 가능성이 쉽지 않아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검찰이 또 다른 공천수사 확대보다는 옛 민주당 대표이자

현 민주당 고문인 한 전 대표의 연루 여부를 부각시켜 '민주당 흡집 내기' 등 이번 사건을 통해 여당 등의 지방선거 정치쟁점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선거 약재? = 민주당은 '공천헌금' 불똥이 이번 지방선거에 결정적 약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 소환과 맞물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척결 의지까지 표명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토착비리 수사가 야권에 대한 표적수사로 작용, 선거국면에 약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경계심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착비리 엄단을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특히 한 전 대표의 소환은 명백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4년 전 일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꺼내든 이유가 뭐냐?"라며 반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4월 23일 오후 한화갑 민주당대표가 공천헌금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조재환 사무총장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표단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비장한 표정으로 당사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미니 민주당', 호남 특별당비로 수도권 선거

### '공천헌금' 당시 무슨 일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구)민주당의 '공천 특별당비(공천헌금)'와 관련, 9일 한화갑 전 대표까지 검찰에 소환되면서 당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재창출했지만 열린우리당과의 분당 이후 총선 대패로 미니정당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인기 하락에 힘 입어 2006년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과거 등식이 다시 성립해 가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지방선거 입지자들 대부분은 열린우리당보다 민주당 쪽에 줄을 대며 출마를 타진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미니정당으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한화갑 대표는 수도권에 후보를 내는 등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정당으로 재도약하려 했지만 당 재정상태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어려웠던 것이다.

때문에 당시 민주당의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19억원으로는 선거 치르기가 어렵다고 보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이 될 경우 돈을 내겠다는 '공천 특별당비' 약정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가능성이 큰 호남에서 특별당비를 받아 수도권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해석된다.

물론 몇몇 의원들은 이에 반발, 회의장을 뛰쳐나오다가 하면 자신의 지역구 입지자들에게 중앙당 연락을 받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공천 헌금'에 강력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 주변에서는 한 전 대표의 인척 모씨와 광주의 모 교수가 '비선 라인'으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뒤이어 호남지역 곳곳에서 공천 후폭

풍이 불기 시작했다.

당시 조재환 사무총장이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최락도 전 국회의원에 가서 전복 김제시장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 2개를 받다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또 기초위원장은 영암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해 역대 최고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 중앙당 재정위원은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1천200여만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당시 광주·전남에는 "공천 명목으로 몇억이 오갔다"는 수많은 소문이 나돌았으며 각종 제보가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에 접수됐고 이는 검찰 쪽으로 넘어갔을 거라는 추측을 낳게 했다. 물론 현재의 수사 상황도 이 같은 각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MB '비리와의 전쟁 선포' 배경과 전망

## 집권 후반기 레임덕 막기 복지부동 확산이 걸림돌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MB)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비리와의 전쟁 선포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법질서 확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착·교육·권력 등 '3대 비리' 근절을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신년연설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을 선언하면서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처리 원칙을 천명해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처럼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정권 후반기 대형 비리가 발생하면서 '레임덕'으로 이어진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나 정지권 안팎의 대형 '게이트'가 발생할 경우,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퇴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공직사회를 비롯,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 표명이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정치적인 흐름을 주시하는 복지부동의 '눈치보기 행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집권 3년차부터 각종 게이트가 불거지곤 했다"며 "집권 후반기 각종 비리를 미리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 구속수사 전자팔찌범 소급적용 이달 처리

검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 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여권은 이른바 '전자팔찌범'을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이달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한 뒤늦은 조치다.

〈관련 기사 6면〉

대검찰청은 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검사, 공판부장검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죄는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동종 전과와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아동 대상 범죄수사 전문화 등 중점시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

하는 방안과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호천사 운동'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 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팔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자팔찌범을 제한적으로 소급적용,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자에게도 체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을 언급, "한나라당이 문제를 긍정 검토하고 이 달 중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정가개**

광주MBC 문화팀방 직권

- VIP 최우선 시영, 특급호텔
- 특석 제곱 시영, 보편적 심리, 최고지식, 별빛시차

고객님들의 강력한 요청 - 영웅상봉! 최고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광주MBC 문화팀방!

# 무안 ↔ 장사직항

장사직항 (무안) 직항	무안 (장사직항) 직항
<p>구 488 301, 47</p> <p>₩ 745,000</p>	<p>구 508 40, 470</p> <p>₩ 799,000</p>

광주MBC 문화팀방 전세기 사무실 ☎62 226-6070